

2025
EBS
수능특강

2025 EBS 수능특강 독서 2. 적용학습 주제통합 | 05 인공 지능과 형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범죄들에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징역형은 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하고 이를 넘어 '사형'이라는 이름(형벌의 예시)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물론이고 극한의 경우 인간의 생명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형법은 인간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 따라서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본문의 핵심어 제시)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생겨났다.(반대로 말해 **책임 원칙은 형법의 기본 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문제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어 방법을 고민하는 데에서 탄생한 원리이므로 형벌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원칙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문단: 형법의 특징과 책임 원칙

책임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로,(책임 원칙의 정의) 형벌의 근거 기능과 형벌의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며**(형벌의 근거 기능), 형량의 결정, 특히 형량의 상한(上限)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형벌의 제한 기능) 이러한 형법의 기본원칙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책임 원칙의 필요성)

2문단: 책임 원칙의 내용과 의의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책임 원칙의 전제 요건)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과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즉 범죄자는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범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는 대상을 이해해야 (나) 지문과의 연계가 나왔을 때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문단: 책임 원칙의 적용 조건으로서의 자연인

한편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일반적인 현행 형법 원칙과는 다른 사례) **우리 법과 판례**(재판에 있어서의 선례를 의미함)에 따르면 법인(法人)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형사 처벌은 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가지는데, 이처럼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양벌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원칙과는 다른 내용의 규정임을 의미)이다. 이는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뿐 아니라 법인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정당화된다.

4문단: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

(나)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능력을 갖추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나)에서 전제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지능형 로봇이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았을 일을 행하였다면 처벌 대상은 누가 될까?**(질문을 통한 문제제기의 전개 방식, 유사한 전개 방식을 단락별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서술 방식으로 출제)

하기 좋습니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능형 로봇이 행한 일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능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위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능형 로봇에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 적용의 필요성)**

1문단: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의 필요성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 스스로 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을 생각하여 형법을 구상하였다.** **(지능형 로봇에 현행 형법이 바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 이에 따르면 기계나 로봇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인식,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나 로봇과는 다르다. 이제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 역시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다.

2문단: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 적용의 가능성

최근에는 인간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이론의 체계(System)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만약 법적 주체의 지위가 지능형 로봇에게도 인정된다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통을 더욱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은 인간은 아니지만 자율적 존재로 존속할 수 있기 때문)** 인공 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인공 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하여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다.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 행위 개념도 재구성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행위라고 규정했다면, 자율적 '존재'의 행위로 변화된 개념 재구성이 가능함)**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다.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는다.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보기> 문제로 새로운 사례와 함께 출제하기도 좋고, (가)와 연계하기도 좋은 단락입니다.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3문단: 체계 이론에 근거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 책임

그렇다면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증명함으로써 장래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형법의 기능)**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 부과를 통하여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4문단: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와 정당화 조건

핵심 정리

(가)

■ 해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형벌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형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

어하는 형법의 기본 원리에는 책임 원칙이 있다. 책임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책임 원칙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서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다만 법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통해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형사 책임을 인정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 주제: 형법의 책임 원칙과 그 적용

■ 구성

- 1문단: 형법의 특징과 책임 원칙
- 2문단: 책임 원칙의 내용과 의의
- 3문단: 책임 원칙의 적용 조건으로서의 자연인
- 4문단: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

(나)

■ 해제: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실용적 측면에서 형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을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인식,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능형 로봇은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사회적 체계는 행위가 아닌 소통이라는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주제: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의 적용

■ 구성

- 1문단: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의 필요성
- 2문단: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 적용의 가능성
- 3문단: 체계 이론에 근거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 책임
- 4문단: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 정당화 조건

**2024
EBS
수능특강**

2024 EBS 수능특강 독서 2. 적용학습 주제통합 | 05 인공지능과 형법 내신 수능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범죄들에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 **제재**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징역형은 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하고 이를 넘어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물론이고 극한의 경우 인간의 생명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생겨났다.

책임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로, 형벌의 근거 기능과 형벌의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며, 형량의 결정, 특히 형량의 상한(上限)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법의 기본원칙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과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즉 범죄자는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현행** 형법에 의하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한편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법과 판례에 따르면 법인(法人)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형사 처벌은 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가지는데, 이처럼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양벌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다. 이는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뿐 아니라 법인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 **정당화**된다.

(나)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능력을 갖추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지능형 로봇이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았을 일을 행하였다면 처벌 대상은 누가 될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능형 로봇이 행한 일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능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위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능형 로봇에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 스스로 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을 생각하여 형법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나 로봇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인식,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나 로봇과는 다르다. 이제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 역시 인간과 ㉣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이론의 체계(System)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

통을 더욱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인공 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하여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다.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 행위 개념도 재구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㉔ **수행하기** 때문이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다.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는다.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증명함으로써 장래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 부과를 통하여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고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일반 원리 중 하나를 소개하며 예외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반면, (나)는 특정 개념을 통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구체적인 상황의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2. (가)를 이해한 것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개인의 범죄 행위가 처벌받았다면, 개인이 속한 법인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 ②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그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형법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 ⑤ 양벌규정은 형법의 기본 원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3. (가)와 (나)를 읽고 나는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현: 어떤 회사원이 회사 내 정보를 활용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뉴스를 봤어. 만약 회사가 감독의무가 있었다면 회사도 처벌을 받겠구나.
- ② 지수: 감독 의무가 있는 회사였다면 암묵적인 책임이 커서 실제 책임 이상의 처벌도 가능한 것이 양벌규정이래.
- ③ 이나: 만약 법인이 자연인이었다면 굳이 양벌규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야.
- ④ 유리: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처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 ⑤ 정아: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4. ㉔~㉞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㉔: 제한
- ② ㉕: 현재 행해지는
- ③ ㉖: 합리화
- ④ ㉗: 비슷한
- ⑤ ㉘: 거행하기

5. (가)를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형벌이 침해하는 기본권이 있을까?

- ② 형벌에서 책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 ③ 책임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양은 어느 정도일까?
- ④ 자연인이 아닌 존재가 처벌받을 수는 없을까?
- ⑤ 양벌규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6.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출시되었다. 이 지능형 로봇은 자발적인 판단 아래에, 스스로를 개발한 회사를 위하여 다른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이때 지능형 로봇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① <보기>의 지능형 로봇의 행위는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외부 세계와 접촉한 것과 다름없다.
- ② <보기>의 기물 파손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체계 이론에 따를 때 <보기>의 지능형 로봇을 처벌할 수 있다.
- ③ 체계 이론에 따르면, <보기>의 지능형 로봇은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전통적 형법에 근거하더라도 지능형 로봇은 자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형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⑤ <보기>의 지능형 로봇을 처벌하는 것이 법익 보호 목적과 무관하다면 형벌 부과와 정당화가 어려울 수 있다.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범죄들에 ㉠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징역형은 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하고 이를 넘어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물론이고 극한의 경우 인간의 생명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

히 사용되도록 ㉡ **제어하는** 방법이다.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생겨났다.

㉢ **책임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로, 형벌의 근거 기능과 형벌의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며, 형량의 결정, 특히 형량의 상한(上限)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법의 기본원칙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과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즉 범죄자는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한편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법과 판례에 따르면 법인(法人)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가지는데, 이처럼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양벌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다. 이는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뿐 아니라 법인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 **정당화**된다.

(나)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능력을 갖추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지능형 로봇이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았을 일을 행하였다면 처벌 대상은 누가 될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능형 로봇이 행한 일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능

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면 처벌의 ㉔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위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능형 로봇에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 스스로 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을 생각하여 형법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나 로봇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인식,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나 로봇과는 다르다. 이제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 역시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이론의 체계(System)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통을 더욱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㉕ **확립**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인공 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하여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다.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 행위 개념도 재구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다.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는다.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증명함으로써 장래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 부과를 통하여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7. ㉔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책임 원칙에 따르면, 인간이 지능형 로봇을 만든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 ② 지능형 로봇에 대하여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형벌 부과 가능성이 생긴다.
- ③ 지능형 로봇이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 자연인과 다름없고 전통적 형법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의 행위도 생각하였다면 지능형 로봇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지능형 로봇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
- ⑤ 책임 원칙과 현행 형법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은 처벌받기 어렵다.

8. (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행 형법의 규정 내용
- ② 형량 설정 기준
- ③ 판례에 따른 자연인 처벌
- ④ 형법 책임 원칙과 특별 규정
- ⑤ 형법 기본 원리의 예외적 규정

9.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이라면 범죄로 처벌받을 일을 저질렀을 때 지능형 로봇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 ②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능형 로봇도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가)는 형법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을 소개하고, 자연인에게만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는 일반 상황에서 벗어나 자연인이 아닌 존재인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보여 주며, (나)는 체계 개념을 통하여 자연인이 아닌 존재 또한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의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① (가)는 책임 원칙에 대해 서술하고 예외적인 양벌규정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며, (나)에서 또한 인공 지능의 책임을 여러 관점에서 살피고 있지는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소개했다고 볼 수 없고, 절충안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가)가 아닌 (나)이다.

⑤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상황의 예시는 드러나 있지 않다.

2. 정답 ①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이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벌금형이 부과될지는 알 수 없다.

② 책임 원칙은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③ (가)의 4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단락에서 징역형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2단락에서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침해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⑤ 책임 원칙은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며, 이에 따르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됨에도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은 기본 원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다.

3. 정답 ②

(가)의 2단락에 따르면, 행위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 크기를 넘어서는 양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양벌 규정의 구체적인 과형 기준 또한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① (가)의 4단락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 또한 처벌을 받는다.

③ (가)의 4단락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연인이려면 당연히 범죄 능력이 인정되어 굳이 필요 없는 규정이 된다.

④ (나)의 3단락에서는 지능형 로봇의 법적 주체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주체로 인정된다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⑤ (나)의 4단락에서는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고 하고 있다.

4. 정답 ⑤

'거행하다'는 명령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본문의 '수행'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바꿔 쓸 수 없다.

①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하는 '제재'와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유의어 관계로 의미가 유사하다.

② '현행'은 현재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하는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정당화'와 의미가 통한다.

④ '유사하다'는 '서로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5. 정답 ③

형벌의 양이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① 1단락에 따르면, 형벌 중 하나인 징역형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② 2단락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여 형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④ 4단락에 따르면, 법인은 자연인이 아님에도 형

사 처벌은 받을 수 있다.

⑤ 4단락에 따르면, 법인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처벌받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6. **정답** ④

2단락에 따르면,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를 생각하며 형법을 구상하였으므로, 로봇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①, ③ 3단락의 체계 이론에 따르면, 인공 지능의 작동이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할 때 사회의 맥락을 구성한다고 한다. <보기>의 로봇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므로 사회적 체계와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접촉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의 지능형 로봇이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행위했다는 점에서 법적 주체의 지위가 인정되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⑤ 4단락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 부과를 했을 때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정당화 가능하다고 하므로, 그렇지 않다면 정당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7. **정답** ①

직접 책임이 있지 않은 대상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닌 양벌규정이며, 인간이 지능형 로봇을 만든 책임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② (가)의 3단락에 따르면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가)의 3단락에서 범죄자의 요건으로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의 자연인이 제시되고, (나)의 2단락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만을 생각하여 구상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 하므로 이 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능형 로봇의 처벌 가능성도 인정된다.

④ (가)의 2단락에 따르면, 책임 원칙은 우선 책임이 있어야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⑤ (가)의 3단락에 따르면, 책임 원칙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하고, 이는 자유 의지를 지는 주체이자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지능형 로봇을 곧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8. **정답** ④

형법의 책임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현행 형법 일반의 예외에 해당하는 양벌 규정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① 1단락에서 규정 내용 일부가 제시되어 있지만, 내용 전반이 이에 대한 것은 아니다.

② 형량 설정의 기준이 책임 원칙에 따른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판례에 따라 법인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자연인은 판례뿐 아니라 형법에서도 처벌 규정이 있다.

⑤ 형법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내용 전반이 이에 대한 것은 아니다.

9. **정답** ⑤

3단락에 따르면 체계 이론은 소통을 더욱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소통에서 찾는다고 한다.

① 1단락에서는 지능형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는 대립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② 3단락에서는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면,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③ 3단락에 따르면,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적 주체의 지위도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일 때 그 주체성을 인정하므로 만약 자율적 판단이 어려운 지능형 로봇이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④ 4단락에 따르면, 형법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므로, 개인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②

4단락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게도 형벌이 부과된다.

① 양벌규정은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